

행정학개론

[총평 : 이경]

시험을 치르시느라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국가직 9급 행정학 시험은 다소 평이하거나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암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문 4. 나카무라와 스물우드의 집행유형, 문 5. 공익에 대한 설명, 문 9. 정부 업무평가 등의 문제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은 80점 이상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며, 공부를 꼼꼼하게 많이 한 경우에는 좀더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으실 겁니다.

<부분별 문항분포>

구분	총론	정책	인사	조직	재무	지방자치
문항 수	2	4	3	6	3	2

과거 서울시나 국회 시험과는 달리, 국가직 9급 시험은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보편적 내용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학 시험의 출제주제들은 기본적인 주제이니만큼 다시 공부하여, 곧 다가올 지방직 시험을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출제경향과 무관하게 공부방법은 동일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경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수험서와 기출문제집을 반복하여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고, 숙달된 이후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합격 발표 전까지 시험결과에 자만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파이팅!

- 이 경 드림-

문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정책-1] 정책네트워크

② [X] 이슈네트워크는 정책네트워크에 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개방적인 특징을 가진다.

<정책네트워크 모형 비교>

모형	참여자	외부참여	상호의존	안정성	상호작용	배경
하위정부	·정 부 관 료, 의회, 이익 집단	제한	가장높음	가장 높음	동맹적	엘리트주의
이슈 네트워크	·정부관료를 비롯, 광범위한 다수	제한없음	낮음	낮음	경쟁적·갈등적	미국식 다원주의
정책 공동체	·관료, 전문가 등의 제한된 참여	다소 제한	높음	다소높음	의존적·협력적	유럽식 사회조절주의

문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직-1] 책임운영기관

② [X]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법」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1. 공무원의 종류별 계급별 정원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① [O] 책임운영기관은 신공공관리론(NPM) 개혁의 일환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관이다.

③ [O]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장이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법」 19조(임용시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O]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책임운영기관법」 제7조(기관장의 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의 임용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 3.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 ③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자치-1] 주민참여

① [X]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개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 [O]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③ [O]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O]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문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 ① 지시적 위임형
- ② 협상형
- ③ 재량적 실험가형
- ④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2] 정책집행

- ④ [O]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구분		정책 결정자	정책 집행자	특징
결정자	고전적 기술 관료형	·구체적 목표 및 수단 설정 ·정책집행자에게 기술적 권한 위임	·기술적 능력 보유 ·미약한 재량권	·정책결정과 집행 분리 ·효과성 중요
	지시적 위임가형	·목표 설정 ·정책집행자에게 재량적 권한 위임	·기술적, 행정적 능력 보유 ·정책수단 결정 ·충분한 재량권	·정책집행자의 재량이 기술관료형보다 큼 ·능률성, 효과성 중요
대응	협상형	·목표 설정	·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합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합의 ·주민만족도 중요
집행자	재량적 실험형	·추상적 목표 설정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권한 위임	·정책목표 구체화 ·정책수단 결정 ·정책집행 책임 ·광범위한 재량권	·정책집행자의 광범위한 재량권 ·수혜자 대응성 중요
	관료적 기업가형	·형식적 결정권자	·정책과정에 대한 실권 보유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 ·정책목표 구체화 ·자원 확보를 위하여 결정자와 협상 ·다양한 능력 보유	·정책집행자의 능력 정보생성 및 통제 ·전문성·정치성 ·체제유지를 중시

- 문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총론-1] 공익

- ② [O] 「공무원 헌장」에서는 공무원이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명시한다.

- ① [X] 「국가공무원법」 제 1조는 공무원이 국가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성과 능률성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X]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인식한다.
④ [X] 공익 과정설에서는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문 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한국연구재단
- ② 국립중앙극장
- ③ 한국소비자원
- ④ 한국철도공사

[조직-2] 공기업 구분

- ② [O] 국립중앙극장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보는 경우 국립중앙극장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
예	·우편, 우체국예금, 조달, 양곡, 책임운영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한국철도공사 등
법인격	·없음	·있음	·있음
설치근거	·정부조직법	·회사법 또는 특별법	·특별법
출자자원	·정부예산(특별회계)	·독립채산제로 운영	
직원신분	·공무원	·임원은 준공무원이나 직원은 민간인	
예산	·국회의결	·이사회 의결	

- 문 7. 엘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정책-3] 엘리슨 모형

③ [O] 관료정치모형은 다양한 목표를 가진 행위자를 전제한다.

① [X]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를 단일한 결정자라고 본다.

② [X]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표준운영절차나 프로그램목록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④ [X] 엘리슨 모형은 쿠바의 미사일 위기사태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합리모형과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을 모두 사용한다. 조직과정모형을 배제하지 않는다.

	합리모형(model 1)	조직과정모형(model 1)	관료정치모형(model 3)
조직관	유기체	하위조직 연합체	독립행위자 집합체
권력	최고층이 보유	하위조직이 분산소유	개인의 정치적 자원
목표	조직 전체의 목표	조직전체+하위조직 목표	조직전체+하위조직+ 개별행위자들의 목표
결정	최고지도자의 명령	SOP, 프로그램 목록	정치적 게임 (타협, 흥정, 지배 등)
일관성	매우 강함	약함	매우 약함

문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총론-2] 정부규제

④ [O]

ㄴ. [O]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O] 공동규제는 민간집단과 정부가 함께 규제하는 제도이다.

ㄹ. [O] 수단규제는 기술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ㄱ. [X]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할 수 없는 것을 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보다 자율성이 보장된다.

- 문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정책-4] 정부업무평가

① [X]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2인이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포함한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O]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라. 공공기관

③ [O] 특정평가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 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 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O]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문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자치-2] 한국 지방자치 연혁

① [O]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6·25 동안으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다가 1952년에 전쟁 중 선거가능지역에서의 지방선거로 제1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56년 제2대 지방의회, 1960년에 제3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② [X]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중단되었으며 1970년대 유신체제에서는 지방자치를 능률적 국정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지목하고, 지방자치라는 용어도 언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30년만에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5년에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③ [X]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X] 정당공천제는 2006년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으며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다.

-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 ② 사회적 인간관
-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 ④ 복잡한 인간관

[조직-3] 조직행태론-인간관

① [O]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고, 조직이 인간의 동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가정하는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이다.

② [X]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이 친교의 욕구를 가지므로 비공식적 집단 등을 통해 구성원의 동기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③ [X]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인간이 성취,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므로 어려운 직무, 자율성의 확대 등을 통해 구성원의 동기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④ [X] 복잡한 인간관은 인간의 동기가 다면적이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문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평정법
 -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 ③ 중요사건기록법
 - ④ 강제배분법

[인사-1] 근무성적평정방식

④ [X] 정규분포 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최적 방법은 강제배분법이다.

- 문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 ③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무-1] 공공재원

② [X]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한 편익을 얻는 후세대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므로 세대 간 형평성이 구현된다. 조세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을 건축할 경우 세대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

- 문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조직-4] 위원회

③ [X]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집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 문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조직-5] 리더십

④ [X]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번스(Burns)가 연구한 변혁적 리더십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

구분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지향	·관리지향	·능력지향
적합한 조직	·기계적 관료제, 기술구조	·유기적 조직, 임시조직
동기부여	·경제적 이익 자극	·영감과 비전 제시, 공유가치 내면화
초점	·하급관리자	·최고관리층

- 문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 ②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③ 엘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 ④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조직-6] 동기이론

① [X] 수단성(instrumentality)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약속된 보상이 실현될 주관적 확률을 의미한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유익성(valence)이다.

② [O] 허즈버그는 만족을 유발하는 만족요인(동기요인)과 불만을 유발하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이 구분되며, 불만이 없다고 해서 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③ [O] 엘더퍼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하여 인간의 욕구를 생존(existence), 관계(relation), 성장(growth)으로 구분하였다.

④ [O] 매슬로우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며,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문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인사-2] 시간선택제

② [X]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최대 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더 긴 시간을 근무하지 않는다.

유형	주요 내용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2010년부터 시행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 ·적용범위 : 일반직(임기제 포함), 별정직 공무원은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의 제한없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가능 ·근무시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0시간(별정직 공무원 15~35시간) 근무 ·근무형태 : 격일제 가능하나 격주제 및 격월제 불가 ·대체인력 :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시 그 남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14년부터 시행중)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채용대상 : 7급 이하 채용, 중앙부처의 경우 전문분야는 인사혁신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 가능 ·근무시간 :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근무, 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승진 :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보수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연금 : 공무원 연금 가입 ·검직 :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검직 가능 ·전일제 전환 :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근무시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종류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

문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 ③ 감수성 훈련 ④ 프로그램화 학습

[인사-3] 교육훈련방법

③ [O]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감수성 훈련이다.

① [X] 역할연기(role playing)란 어떤 사례를 몇 명의 피훈련자가 나머지 피훈련자들 앞에서 실제의 행동으로 연기하고, 사회자가 청중들에게 그 연기 내용을 비평·토론하도록 한 후 결론적인 설명을 하는 교육훈련 방법이다.

② [X] 직무순환은 여러 가지 보직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시야와 경험을 넓히고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④ [X] 프로그램화 학습은 학습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단위학습으로 구조화하여, 단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학습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 개별학습의 한 형태이다.

- 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 ②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 ③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 ④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재무-2] 예산편성제도

④ [O]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을 통제하고 회계적 책임을 담보하기에 용이한 제도이다.

① [X] 예산편성에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영기준예산(ZBB)이다.

② [X] 활동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주의예산(PBS)이다.

③ [X] 케네디 행정부에서 국방부에 도입되고, 이후 존슨 행정부에서 연방정부로 확대된 것은 계획예산(PPBS)이다.

- 문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재무-3] 예산집행의 신축성

② [X] 이용과 달리 전용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전용은 국회 승인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